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
----------	------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의자 : 김도운, 이명녀, 박경흠,
정재환, 문희성, 홍영진,
강혜순, 김태욱, 문기호

1. 제정이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안 제7조)

바. 한옥의 매수 등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3조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제25조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3. 11. 3. ~ 11. 10.(8일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제4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

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 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세제 등의 감면 노력) 구청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옥의 매수 등) 구청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구청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해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

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건축과
- (직 급) 시설7급
- (이 름) 정현진
- (연락처) 290-4032